

제1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김상배(서울대학교)

I. 머리말

최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중견국(中堅國)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강대국 외교’나 ‘약소국 외교’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적 범주로서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국제정치학계에서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2010년대 초엽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그 외교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정책 차원의 논의로도 발전해 갔다. 이러한 이론적·정책적 논의의 중심에는 제1세대(또는 1.5세대) 중견국 그룹에 해당하는 캐나다나 호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또는 제2세대 중견국 그룹인 브릭스(BRICS) 중에서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의 중견국 외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를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김상배 2016).

2010년대 초반의 중견국 외교론은 전통적인 군사안보 문제보다는 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 진행되는 국제규범 형성과 이에 참여하는 외교 활동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G8과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사이에서, 그리고 서방 진영과 비서방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논했다. 글로벌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는 때마침 이명박 정부의 믹타(MIKTA) 외교 추진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멕시코(M), 인도네시아(I), 한국(K), 터키(T), 호주(A) 등과 같은 국가들의 연대외교는 한국이 모색할 글로벌 중견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 했다. 이에 비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주변 열강들의 각축 구도 속에서 중견국 외교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회의적 시

선이 쏟아지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중견국 외교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거론할 상황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또는 ‘중재(仲裁)외교’ 등과 같은 용어를 거론하며,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한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적 ‘코리아 패싱’이니 ‘조수석에도 못 앉을 처지’라며 비아냥거리는 담론이 오고갔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였다. 지정학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그것도 전형적인 전통 국제정치의 의제인 핵문제를 놓고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만 중견국 외교의 논의를 한정하려 했던 2010년대 전반기의 분위기에 비하면 그 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출범 초기 큰 기대를 낳았던 문재인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난항을 겪었다.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지정학 공간만 상정해서는 중견국 외교가 작동할 여지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정학적 공간의 주변정세 변화와 글로벌 공간의 질서변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역으로 글로벌 질서변동의 문제를 대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지정학적 동학을 직시해야 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중견국 외교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부합하여 중견국 외교 연구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2010년대 초반의 연구가 글로벌 공간에 주목한 ‘중견국 외교 연구 1.0’이었다면, 향후 연구는 글로벌 공간과 지정학 공간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보는 ‘중견국 외교 연구 2.0’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신흥무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전통과 신흥의 복합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중견국 외교의 사례

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견국 외교 2.0'이 추구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절은 '중견국 외교 2.0'이 펼쳐지는 신흥무대의 복합적인 성격과 그 위에서 벌어지는 신흥권력 게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제3절은 구조적 위치론, 중견국의 국익론과 네트워크 전략론 등과 같은 이론적 자원을 원용하여 신흥무대에서 추구할 '중견국 외교 2.0'의 전략적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4절은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가 전개되는 동학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복합지정학 시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제5절은 이 책에 실린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동맹과 통상 같은 전통무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우주, 환경·보건, 인권·난민 등의 신흥무대에서 펼쳐지는 중견국 외교의 복합지정학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맺음말은 이 책의 연구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로서 '중견국 외교 연구 3.0'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1. 신흥무대의 개념적 이해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신흥무대(新興舞臺, emerging stage)'라는 말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대'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새로운 무대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신흥(新興)'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국내 자연과학계에서는 흔히 '창발(創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신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개념어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미시적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그 양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게 되고, 더 나아가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부상은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를 거쳐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게 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김상배 편 2016).

첫째, 신흥무대라 함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했던 기성 국제정치 무대의 지평을 넘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환경, 보건, 인권, 난민, 기술, 정보,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의 무대를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슈의 새로움'이 신흥무대의 기본조건이다. 대부분 복잡계 환경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이들 이슈들은 그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나서 특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질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양질전화'의 과정을 거쳐서 세계정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 이슈들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한 사건들이었지만, 그 발생 숫자가 늘어나서 갑작스럽게 양질전화의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가적 관심을 끄는 전략적 이슈가 된다. 이러한 와중에 미시적 안전과 거시적 안보를 구분하던 종전의 경계는 무너지고, 사소한 일상생활 속의 안전문제라도 거시적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둘째, 신흥무대의 특징은 복잡계 환경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의 연계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신흥무대 중에서도 어느 한 이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다른 이슈들과 연계되어 일종의 '임계점'을 넘을 경우 쟁점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슈의 연계성'이 신흥무대의 기본조건이다. 신흥안보의 사례를 들면, 안보 이슈들 간의 질적 연계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한 부문에서 발생한 안전의 문제가

임계점을 넘어서 거시적 안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전통무대의 이슈라도 신흥무대의 이슈와 연계되면 그 결과는 신흥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슈연계의 문제는 양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링크 하나를 더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흥안보의 이슈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메우는 질적인 변화의 문제이다 (Burt 1992). 다시 말해 끊어진 링크들이 연결됨으로써 전체 이슈구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와중에 해당 이슈의 ‘연결 중심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신흥무대의 특징은, 단순히 새로운 이슈들의 양적 증가와 상호 연계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이슈들이 전통무대와 연결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시적 차원의 민간 이슈가 거시적 차원의 국가 이슈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하는 세계정치 무대는 ‘신흥과 전통의 복합무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질전화나 이슈연계성을 통해서 창발하는 신흥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 이는 명실상부한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이르면 국가 행위자가 개입할 근거가 발생하게 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이렇게 보면, 신흥무대 문제는 전통무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는, 그 개념적 경계 안에 전통무대 문제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흥무대의 신흥권력 게임

이러한 신흥무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권력게임으로서 ‘신흥권력’(emerging power)이 부상하는 장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무대가 새로운 권력공간으로 급부상하면서 그 무대 위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세계정치 행위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흥무대 위의 권력적 향배는 전통무대를 포함하는 세계정치 전반의 권력게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흥무대의 신흥권력 게임은 세계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복합적인 권력게임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흥권력의 부상은 권력과 국가 및 질서의 세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변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하영선·김상배 편 2018).

첫째, 신흥권력의 부상이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 세계정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성격 변환’(power transformation)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경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권력 게임을 넘어서 기술·정보·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비(非)물질적 자원을 둘러싸고 진행될 것이며, 더 나아가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원과 속성으로 환원되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권력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변환의 현상은 국제정치에서 전통무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 보건·질병, 바이오, 식량, 이주·난민, 인권, 개발협력, 사이버 공간 등과 같은 신흥무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신흥권력의 부상은 단순히 권력게임의 성격변환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권력주체의 분산’(power diffusion)도 의미한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는 새로운 행위주체로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신흥무대를 중심으로 국가 행위에 못지않은 신흥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 행위자들로 는 다국적 기업, 금융자본, 글로벌 싱크탱크와 지식 네트워크, 초국적

시민운동 단체, 테러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국가 차원을 넘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등도 사례로 들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행위자 자체도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형태의 변환을 겪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며 새로운 국가모형을 찾아가고 있다.

끝으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신흥권력의 부상이라고 하면 세계정치 행위자들 간의 ‘권력이동’(power shift), 즉 권력구조의 변동을 암시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신흥권력 또는 신흥국가의 부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동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권력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예견케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어느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의미를 넘어서 종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 있던 패권질서를 변화시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권력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변동의 과정에서 관건은 오늘날의 미중경쟁이 과거 국제정치사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단순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양상을 되풀이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요컨대, 21세기 세계정치는 새로운 권력게임의 출현과 새로운 행위체제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신흥권력의 부상,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패권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흥권력 게임의 복합구조와 작동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중견국 외교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신흥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중견국 외교 2.0의 성패는, 신흥권력 게임의 복합구조 속에서 자국이 차지한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중견국 외교론의 원용

1. 구조적 위치론과 중견국 국익론

중견국 외교 연구 2.0은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을 넘어서 2010년대 후반의 복합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이론을 개발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중견국이 처해 있던 세계정치의 환경이 다르고 이를 헤쳐 나가는 실천적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로 강대국의 국제정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 즉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이론적 전제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을 펼치는 작업은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담론적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은 단순히 중견국의 속성을 지닌 나라의 외교를 논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제3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나 지리적·기능적으로 중간지대에 위치한 나라의 외교만을 논하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외교나 약소국 외교와는 다른 ‘중견국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적 범주의 개발이 필요하다(김상배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은 전통적인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중견국의 ‘속성론’이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중견국의 ‘행태론’을 넘어서야 한다. 행위자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그 행위자가 처한 ‘관계’와 ‘구조’의 맥락에 주목하는 ‘구조적 위치론’의 발상이 필요하다. 구조적 위치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나 세계체제론에서 말하는 고정된 ‘구조,’ 즉 위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론을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이 주목하는 ‘구조적 위치’의 개념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정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에 바

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치론은 현실주의가 상징하는 중견국 자격(middlepowerhood)이나 자유주의가 상징하는 중견국 기질(middlepowermanship)을 넘어서는 ‘중견 국가지’(中堅國家智, middle power intelligence)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상황지성이나 위치지성 또는 틈새지성 등으로 대변되는 ‘중견 국가지’ 개념의 유용성은 ‘구조’와 ‘행위자’를 모두 고려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 구조적 위치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견국 외교 2.0은 대내적으로도 중견국이 추구할 국가이익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한다. 중견국 외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외교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문제 이외에도 대내적으로도 중견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중견국의 국가 성격의 문제는 중견국 외교의 방법과 원칙, 목표가 되는 국가이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위치론이 주로 밖으로부터 규정되는 중견국의 대외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내부적 차원에서도 구조적 위치론은 중견국이 추구할 국가이익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 개념의 재규정 문제는 중견국이 자리 잡은 구조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견국은 강대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확장된 국가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개도국의 경우처럼 협소하게 규정된 국가이익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처지이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중견국 외교 2.0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해된 ‘열린 국가이익론’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 2.0은 종전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식, 이념, 외교와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유인하고 회유하여 끌어당기는 힘,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와 통한다. 둘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 2.0은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만족시키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이익의 일방적 추구를 넘어서 인식의 공유와 연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끝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 2.0은 국제사회와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외교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익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리외교를 넘어서 규범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규범외교의 추구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견국 외교는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한다. 중견국의 관점에서 외교적 역할과 국익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는 과정은 국내정치적 과정이며 동시에 담론적 실천의 과정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외교를 추진하는 여정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국인에게 중견국 기질이 얼마나 있으며, ‘중견지(中堅智)’는 얼마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할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중견국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국민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관련 민간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조율하는 이른바 ‘중견국 내교(內交)’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교부 및 정부부처, 중앙-지방정부의 중견국 외교 추진체계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견

국 외교가 지향해야 하는 21세기 미래국가의 시스템 전반과 관련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론

이상의 구조적 위치와 정체성 및 국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견국 외교 연구 2.0은 중견국이 추구할 외교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야 한다. 중견국 외교 연구 2.0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전략의 내용은 세 가지 차원의 네트워크 전략, 즉 중개외교, 연대외교, 규범외교의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각기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의 세 가지 아이টে은 전통무대에서도 필요하지만, 복합적인 구조와 동학을 특징으로 하는 신흥무대에서 더욱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공간과 지정학적 공간의 복합공간을 헤쳐 나가는 중견국 외교전략의 의미를 지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김상배 2014).

첫째, 중개외교는 중견국이 지향하는 네트워크 전략의 대표적인 아이টে은이다. 오늘날 한국에 요구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개, 즉 기존 관계구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관계의 상호 작동성을 원활하게 하는 '거래적(transactional) 중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네트워크상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개외교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흐름'이 아닌 '의미의 흐름'까지도 중개할 뿐만 아니라 각 행위자들의 이익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개라는 의미에서 '변환적(transformative) 중개'로 개념화된다. 이

러한 변환적 중개의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 위치'를 잘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슈구조 하에서 국가이익과 리더십을 반영한 '위치잡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이론적 직관으로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이른바 '지식외교'의 문제이다.

둘째, 중견국의 중개외교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병행해야 할 중요한 아이টে은 중의 하나는 연대외교이다. 전통적으로 외교의 장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동지국가들(同志國家, like-minded countries)과 공조하는 연대외교는 중견국 외교의 단골메뉴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 차원에서 제기되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차원에서 연대외교의 모색은 중요하다. 이는 특히 '약한 연대의 힘'(power of weak ties)을 활용하는 효과가 크다. '약한 연대'의 이론에 의하면, '예수의 탄생을 알고 방문한 동방 박사들'처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마당발 친구'는 오히려 평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 중에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견국 외교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 그러한 동지국가들을 찾아서 연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연대의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공동의체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동지국가 외교는 기본적으로 개방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특정 그룹을 넘어서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끝으로, 중개외교나 연대외교와 병행되어야 할 또 다른 중견국 외교의 아이টে은은 규범외교이다. 아무리 중견국이라고 할지라도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보편적 표준을 제시하는 규범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외교는 세계질서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중견국 외교의 '프레임 짜기'를 의미한다. 최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중국몽(中國夢)'으로 대변되는 미중 두 강대국들의 동상이몽 사이에서 한국은 이른바 '중견국의 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글로벌 또는 동아시아 질서의 프레임을 짜야 미중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한국이 제시하는 '꿈'에 동의할까? 중견국의 꿈은 강대국들을 제치고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질서를 세우려는 것일 수는 없다. 자국 중심의 질서를 꿈꾸는 강대국의 꿈이 아닌 중견국의 꿈은 기본적으로 '복합의 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이 과거 약소국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짚어내는 꿈을 꿀 수 있느냐, 그래서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해 보는 중견국 꿈의 내용, 또는 한국 규범외교의 브랜드는 무엇일까? 단순히 '중견 국가지'를 발휘하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중견국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배 2019).

IV. 복합지정학 시각의 원용

1. 새로운 지정학의 시각

중견국 외교 연구 2.0이 말하는 '구조'는 전통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지정학적 '구조'라기보다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에서 파생되는 '구조'이다. 물론 그 저변에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밑거름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국의 중견국론이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쇠퇴와 중

국의 부상이라는 해륙(海陸)국가 간 세력전이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 지정학의 구도에서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운신할 공간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논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공간에 고착된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물질적 권력 기반의 전통안보 게임에만 주목하는 발상도 넘어서야 한다. 결국 중견국 외교 연구 2.0은 글로벌한 비지정학적 공간과 비물질적 권력 기반의 신흥권력 게임을 포괄하는 발상을 적극적으로 원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지정학적 시각과 함께 탈지정학인 요소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제안한다.

최근 부쩍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착안한다. 사실 정치가 지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지리적 맥락에서 정치를 이해하려는 사고는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이지만, 정치의 지리적 차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체계적인 학(學)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벌어진 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일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189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지정학은 2차 대전 종전까지 많은 정치가와 관료 및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때 지정학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이 보였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지정학 혹은 정치지리학의 주요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고전지정학의 굴레를 벗어던지려는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다. 일군의 학자들은 비판지정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정학의 근본적 가정을 새롭게 재검토하는 작업을 펼쳤다(김상배 2015).

이러한 학술적 담론의 진화의 과정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실 국제정치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그 세를 넓혀 가고 있다. 특히 러시

아의 크림반도 점령, 중국의 공격적 해상활동, 중동 지역의 고질적인 분쟁 등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정치학에서 지정학에 대한 논의가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온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지정학적 합의를 뒤집으려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문제제기가 출현하면서 그야말로 지정학이 부활하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듯하다. 미·중·일·러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한반도도 이러한 지정학 부활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최근 북한이 벌이고 있는 행보는, 아무리 탈냉전과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가 되었다 해도 한반도 국제정치는 여전히 지정학적 분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김상배 2015).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국제정치 분석에 있어서 지정학적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와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에서는 더욱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정학의 시각을 다시 소환한다고 할지라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잉태된 고전지정학의 시각을 그대로 복원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글로벌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탈영토공간적인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사정을 돌아볼 때, '영토 발상'에 기반을 두고 이를 부분적으로만 개작하려는 현재의 시도로도 부족하다. 오늘날 세계와 한반도의 상황이 변화한 만큼, 이를 보는 지정학의 시각도 변화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걸맞게 변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고전지정학, 비지정학, 비판지정학, 탈지정학 등을 동시에 품는 개념으로서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제안한다(김상배 2018).

2. 복합지정학의 이해

첫째, 고전지정학은 권력의 원천을 자원의 분포와 접근성이라는 물질적 또는 지리적 요소로 이해하고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는 자원권력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행위자 간의 패권경쟁과 세력전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통한다(Gilpin 1981; Organski and Kugler 1980).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세계전략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지정학의 귀환'(the return of geopolitics)이 거론된다(Mead 2014). 고전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신홍무대의 세계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원권력을 놓고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고전지정학적 경쟁이 생성하는 물질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자원권력의 역량이 열세인 약소국 또는 중견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행보를 펼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비지정학의 시각은 냉전의 종식 이후 영토의 발상을 넘어서는 초국적 활동과 국제협력 및 제도화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글로벌화 담론과 통한다. 영토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자본과 정보 및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호의존'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들어 탈냉전 이후의 평화를 가능하게 했던 물질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정학의 부활'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자유주의적 성향의 미국 학자들은 여전히 '지정학의 환상'(the illusion of geopolitics)을 경계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Ikenberry 2014). 이러한 시각에서 본 신홍무대의 세계정치는 영토국가의 공간에 기반을 둔 갈등의 메커니즘보다는 글로벌 공간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개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중견국 외교 1.0은 이러한 글로

별 공간의 이슈구조를 전제로 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셋째, 1980년대에 등장한 비판지정학의 시각은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지정학이 원용하는 담론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한다.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지정학적 현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고 해석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O'Tuathai 1996).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지정학적 현상은 담론적 실천으로 재규정을 시도하는 권력투사의 과정이다. 아직까지 신흥무대의 위협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안보 행위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협'의 성격이 강하다. 코펜하겐 학파로 불리는 국제안보 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안보화'(securit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Hansen and Nissenbaum 2009). 중견국 외교 2.0은 (고전)지정학적 공간과 비지정학적 공간이 상호 복합되면서 구성하는 관념구조를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끝으로, 탈지정학의 시각은 지리적 차원을 초월해서 형성하는 탈영토적 '흐름의 공간'(space as flows)을 탐구한다. 탈지정학의 논의가 주목하는 공간의 대표적 사례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다(Steinberg and McDowell 2003). 그야말로 그 공간의 형성 자체가 지리적 차원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발생의 주체로서 인간 행위자 이외에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행위능력(agency)이 작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물리적 인프라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의 변수가 복합되어 만들어내는 신흥무대의 공간은 탈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탈물질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고전)지정학적 공간과 글로벌 공간을 복합하는 중견국 외교 2.0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흥무대에서 벌어지는 세계정치 현상은 고전지정학의 단순계적 발상을 넘어서는 복합지정학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이 주는 유용성은 앞서 제시한 신흥무대의 구조적 복합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중견국 외교 2.0은 세계정치의 무대라는 공간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발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신흥무대의 구조는 고전지정학의 '물질구조,' 비지정학의 '이슈구조,' 비판지정학의 '관념구조,' 탈지정학의 '탈물질구조'로 구성되는 다층적 복합구조이다. 이러한 복합구조의 작동방식은 신흥무대의 비지정학적이고 탈지정학적 현상들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이슈연계가 심화되면서 (고전)지정학적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전통무대만큼의 주목을 받는 국제정치 이슈로 창발하는 과정을 밟는다.

V.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이 책은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는 여덟 개의 주제를 네 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첫째, 전통무대의 어젠다이지만 최근 새로이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맹외교와 통상외교를 다루었다. 둘째, 기술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는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문제로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를 다루었다. 셋째, 환경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부상하는 신흥무대의 이슈로서 환경 분야의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외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사회시스템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신흥무

대의 이슈로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1부 ‘전통무대의 변환과 중견국 외교’는 동맹외교와 통상외교의 사례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2장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 질서 추구”(정성철)는 쇠퇴하는 미국의 패권과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 사이에서 형성되는 동맹외교의 복잡지정학적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였다. 탈냉전기에 형성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약화되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른바 ‘G2시대’의 도래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각기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을 내세우며 복합적인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2장은 이러한 복잡구조 속에서 민주국가로서 호주와 인도가 취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사례들이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3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통상”(이승주)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다양한 이슈들과의 연계가 점차 확대·강화되면서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통상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이슈의 양적 증대와 표준경쟁의 전개, 그리고 새로운 질서형성 등을 겪으면서 전통무대의 이슈이지만 새로이 신흥무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통상무대의 복잡구조에 주목하였다. 특히 제3장은 통상무대의 구조변환 과정을 1980년대 탈냉전기 중견국 외교의 사례로서 케언즈 그룹에서의 호주의 역할, 1990년대-2000년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2010년대 이후 미중이 벌이는 무역질서의 표준경쟁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등에서 나타난 중견국 외교의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제2부 “기술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 국제규범 분야의 중견국 외교를 다룬 두 논문을 실었

다. 제4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스윙국가 중견국 외교: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유인태)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중견국 외교를 추구한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를 다루었다. 제4장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 복잡구조의 사례로서 주목한 것은 넷몬디얼, 브릭스(BRICS), 그리고 사이버공간총회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국제협력의 프레임이 지니는 구조적 성격의 차이는 세 나라에게 상이한 ‘구조적 위치’를 제공했으며, ‘스윙국가’의 역할을 추구했던 세 나라의 중견국 외교가 드러낸 차이로 이어졌다.

제5장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유준구)는 냉전기부터 강대국 외교가 지배해 온 전통무대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 우주공간이, 최근 새로운 이슈들의 양적 증대와 그 상호연계성의 강화 등을 바탕으로 신흥무대의 세계정치 이슈로 부상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역사적으로 우주안보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는 지정학적 메커니즘이 투영되어 왔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비서방 진영이 우주 분야의 국제규범의 내용구성과 접근방식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그럼에도 제5장은 최근 우주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지정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담당할 외교적 역할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제3부 “환경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외교의 사례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6장 “REDD+ 설립을 위한 중견국 기후·산림외교 연구”(김성진)는 신흥무대로서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산림흡수원 문제가 연계되어 생성되는 복잡지정학적 구조와 그 틈새를 공략하는 중견국 외교를 다루었다. 특히 UNFCCC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도출된 ‘REDD+’이라는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제6장이 주목한 사례는 촉매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한 유럽국연합과 거부권자의 역할을 넘어서 관리자 역할을 발휘한 브라질, 가교건설자이자 관리자 역할을 한 노르웨이 등의 중견국 외교였다.

제7장 “신흥무대의 중견국 보건의료”(조한승)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신흥무대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사례를 다루었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나서서 형성하고 있는 보건과 안보 및 개발협력의 복합구조에 주목했다. 이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를 발휘한 국가들 중에서 합의가 큰 사례로서 제7장이 주목한 나라들은, 정부 간 보건의료정책의 제도화를 시도한 스위스, 지속가능개발과 보건을 결합한 스웨덴, 인권으로서의 보건과 남남협력 리더십을 보여준 브라질 등이었다.

제4부 “사회안보 무대의 중견국 외교”는 인권 및 난민 문제를 다룬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제8장 “미중관계와 인권: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과 가능성”(김현준)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한 인권문제가 지닌 복합지정학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미중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양국이 벌이는 안보, 무역, 기술, 문화 분야 갈등과의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은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를 계기로 뜨거운 현안이 되었다. 제8장은 이러한 미중 인권갈등의 와중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을 양자 및 다자 외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이들의 중견국 외교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제9장 “글로벌 난민위기와 중견국 외교의 딜레마”(이신화)는 21세기 신흥무대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신흥안보 이슈로서 난민 문제가

지니는 복합지정학적 성격을 탐구하였다. 최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듯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문제는 여타 정치사회적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그 위협이 증폭되면서 지정학적 현상으로 창발하고 있다. 제9장은 이러한 난민 문제의 복합구조에 대응하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호주와 일본이 실리 위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외교를 펼치고 있다면, 캐나다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편적 인권보장의 발상으로 난민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난민 문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중견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VI. 맺음말

이 글은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보는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신흥무대는, 단순히 새로운 무대라는 의미를 넘어서, 양질전화-이슈연계-지정학적 임계점으로 창발하는 단계를 거쳐서 전통무대와 만나는 복합무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신흥무대 위의 세계정치는 자원권력으로부터 네트워크 권력으로 권력게임의 변환을 겪고 있다. 아울러 신흥무대의 권력게임에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존의 국가모델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양상도 내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출현하는 신흥무대의 미래 세계질서는 예전에 전통무대의 국제정치가 상징했던 모습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악된 신흥무대의 세계질서는 복합지정학 시각에서 그리

고 있는 물질구조-이슈구조-관념구조의 복합구조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복합구조 속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중견국 외교 2.0'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가 부여하는 과제는, 예전의 개도국 시절에는 국가적 관건이 아니었을지라도, 새로이 중견국의 위상을 접하게 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하는 구조적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지성'과 그러한 구조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지성'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견국 외교의 환경이 지정학적 단순구조를 넘어서 좀 더 복잡한 구조와 질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안고 있는 과제는 단지 동북아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미중 사이 또는 북미 사이에서 중개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찾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글로벌 공간에서 벌어지는 비지정학적 경쟁과 사이버 공간의 탈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문제를 새롭게 보는 발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신흥무대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글로벌 공간과 지정학적 공간을 동시에 품는 중견국 외교 2.0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복합구조를 헤쳐 나가는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견국 외교 2.0은 기존의 지정학 이론이 제시했던 단면적인 역량강화나 국내적인 제도정비 일변도의 발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신흥무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신흥권력 게임의 양상은 기성 국제정치의 전제가 되었던 권력의 성격이 자원권력으로부터 네트워크 권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미중이

벌이는 패권경쟁을 보면 자원권력에 기반을 둔 단순한 '세력전이'가 아닌 복합구조 변환을 전제로 한 '세력망(Network of Powers)'의 재편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이 추구할 중견국 외교는 '중개지성'과 '집합지성' 및 '설계지성'을 구비한 복합적인 네트워크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견국 외교 2.0은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이 상정하고 있던 '국민국가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국가모델 또는 미래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한다. 이른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모델로 명명할 수 있는 미래 국가모델은 기존의 국가 행위자와 새로이 부상하는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메커니즘을 담아야 한다. 또한 미래 국가모델은 예전 개도국 시절의 좁은 의미의 국익론을 넘어서 국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견국의 외교적 정체성과 국익의 개념을 새로이 설정하는 과정이 국내정치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중견국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국민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관련 민간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익을 조율하는 정치외교 리더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견국 외교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들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나 더 나아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정책 네트워크도 큰 변수가 된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정치체제의 성격도 중견국 외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에 대한 연구 또는 중견국의 미래국가 모델에 대한 연구로서 '중견국 외교 연구 3.0'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 _____. 2015. "사이버 안보의 복합 지정학: 비대칭 전쟁의 국가전략과 과잉 안보담론의 경계." 『국제지역연구』 24(3): 1-40.
- _____. 2016.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모색: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손열·김상배·이승주 편, 『한국의 중견국 외교』. 명인문화사. 29-63.
- _____. 2018.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한울.
- _____. 2019. "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규범외교: 네 가지 모델의 국제정치학적 성찰." 『국제정치논총』 59(2): 51-90.
- 김상배 편. 2016. 『신홍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사회평론.
- 하영선·김상배 편. 2018. 『신홍무대의 미중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한울엠플러스.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sen, Lene and Helen Nissenbaum. 2009.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4): 1155-1175.
-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3(3): 80-90.
- Mead, Walter Russell.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93(3): 69-79.
- ÓTuathail, Gearóid. 1996. *Critical Geopolitic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rganski, A.F.K. and Jac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inberg, Philip E., and Stephen D. McDowell. 2003.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196-221.